“영산강 뱃길복원 주변 환경과 조화 이뤄야”

■ 정명원 위원장 등 국가 건축위원들 현지 답사

“정부 지원 단일 채널 만들어 적극 도울 터”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하천 주변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성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은 26일 영산강의 수변경관과 공간 환경경관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등 자문을 위해 영산강 주변지역을 방문했다.

정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나주시청을 방문, 현안을 청취한 뒤 영산포 하천 둔치를 둘러보고 황포돛배나루터에서 영산나루터까지 황포돛배를 시승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 대운하와는 확연히 다른 ‘영산강 살리기’를 기본으로 한 치수·이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단순히 뱃길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변 주위의 건축과 도시계획시 도시 디자인 개념을 살려 수변 경관을 조성하고, 하천과 인근 경관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하도준설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천환경개선 사업과 주변 마을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 각종 계획이 어우러진 종합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지원과 관련해 단일 채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사업이 친환경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정책위원들도 영산강은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폭넓은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영산강 내외부의 새로운 디자인과 공간 환경 조성계획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국가 건축정책위원회가 이번 현장방문을 토대로 영산강 수변경관과 하천 내외부 공간을 경쟁력 있게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6일 영산강을 찾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위원들이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중앙 - 지방지원단’ 구성

새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동기구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이 이끄는 합동지원단에는 ‘4대 강 살리기사업’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시행되는 ‘선도사업지역’에 속한 나주, 함평, 충주, 안동, 김해, 양산, 연기 등 7개 기초단체와 전남, 경기, 충북,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등 8개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합동지원단은 앞으로 ‘4대 강 살리기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걸림돌을 찾아내 없애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대기업도 자발적 구조조정해야”

李 대통령 지식경제부 등 업무보고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에 앞서 대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런 기회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발적으로 구조를 조정해서 주력 업종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왔고, 또 이를 뛰어넘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겠다”면서 “각계 각 분야를 포함해 기업들이 아주 세계적인 선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대책이 수립됐으면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부문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면서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도 방통융합을 통해 가져올 수 있고, 또 앞서가는 IPTV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합심해 그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2009년 업무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면서 “내년 1·4분기, 2·4분기가 실물경제의 최하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에 하루가 시급하다.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앞장서 선도적인 대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MBC, SBS, CBS, EBS 등이 파업동참을 선언,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나 신문사들 대부분은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0월23일 언론 독립과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률 82%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특가법 개정안 공포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최고 5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5배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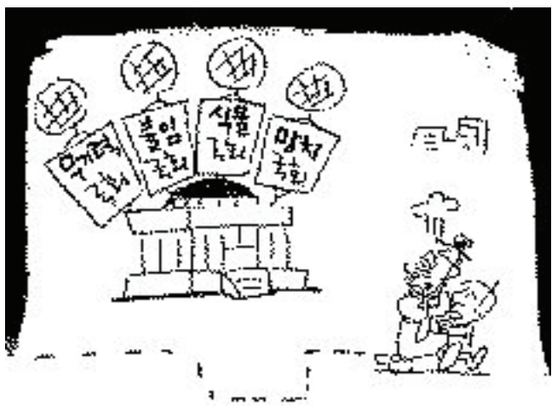
예를 들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공포해 금융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처럼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뇌물 사범에게 반드시 수뢰액보다 많은 벌금이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부패 구조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훈장을 여러개 붙였도다

헌재 ‘美 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연합뉴스

사 설

‘2015하계 U대회’ 유치 시민참여에 달렸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각계 대표로 참석한 170여명의 유치위원들이 창립총회를 갖고 대회 유치를 다짐했다. ‘국제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지구촌 대학생들이 2년마다 모여 겨루는 유니버시아드(U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 이상의 뜻을 갖는다. 대회 개최지는 전세계 170여개국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된다. 잘만 치러내면 도시 이미지가 올라가고 투자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부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세계 유명 도시들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광주를 포함해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애드몬턴, 브라질 리우와 브라질리아,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비고와 그라나다 등 6개국 8개 도시가 도전장을 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유치위원회가 각오를 보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대회 유치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에 득표 전략도 남달라야 한다. 재도전 결정 과정에서 나온 시민의 견을 간추려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2013년 대회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외교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 차원의 뒷받침 없이는 투표권을 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 27명을 제대로 설득해내기가 쉽지 않다.

광주시민들이 합심해 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집행위원들도 유사한 조건이라면 주민 참여도를 보고 개최지를 고른다고 한다. 시민참여가 광주의 미래를 바꾼다.

환황해시대 이끌 무안 ‘한·중 국제산단’

무안기업도시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양국 투자자들이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정자본금을 모두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한·중 국제산단은 수교 1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중국자본 유치다. 법정자본금 1천538억원 가운데 51%를 중국 측이 냈다. 17.7㎢ 부지에 1조6천921억원을 투입해 제조업 단지, 차이나시티 등을 건설한다. 특히 목포 신외항, 무안 국제공항과 연계한 세계 최대 도매유통단지 건설이 핵심이다.

중국이 무안에 경제협력지구를 만드는 이유는 자명하다. 가능성을 본 것이다. 항만과 공항을 갖췄고, 전남도청이 위치한 한반도 서남권의 중심이면서 자국과 가까워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한발 앞서 글로벌화하고 있는 한국을 우회 수출창구로 삼아 공동발전하자는 포석이다.

물론 무안기업도시가 갈 길은 아직 멀다. 한·중 국제산단도 다음달에 기업도시심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실물경기 침체다. 이로 인해 기업도시 내 국내산단이 아직 참여기업을 찾지 못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의 ‘기업도시는 참여정부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다.

그래도 무안의 성공 가능성은 크다. 30년 앞을 내다본다는, 손해 볼 장사는 애초에 안 한다는 중국 상인들이 결정한 투자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간다고 하지 말고, 무안기업도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가 차원 U대회 유치 지원 체계 구축”

정의화 U대회 유치 위원장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장을 맡은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60)은 “광주 시민의 여망을 이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 대회 유치를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호남과 영남의 동서 화합에 기여한 공로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아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됐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광주가 지난 2013년 대회 유치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데다 국제 스포츠 세계에서의 인지도도 어느 정도 높아져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대회 성공 유치는 국제도시 발돋움 계기”

이승기 U대회 후원회장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를 위해 후원회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선 U-대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 후원회 활동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U-대회 성공 유치는 광주가 첨단산업의 기반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